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따른 지역-산업별 생산유발효과 분석

An Analysis of Production-Driven Effects from
Three Free Economic Zones in Korea

박추환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조교수(제1저자 및 교신저자)
김의준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과학부 지역개발전공 부교수
신동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정책분석관

※ 주요단어: 경제자유구역, 생산유발효과, 다지역산업연관분석

목 차

- I. 서론
- II.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 III. 경제자유구역별 지역-산업 간 생산유발효과 분석
 - 1. 분석개요
 - 2. 분석결과
- IV. 결론

※ 이 논문은 2006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한 것임.

I. 서론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주변국 간 경쟁 심화와 중국의 급부상, 대내적으로 기존 제조업이 더는 성장 동력이 되기 어려운 실정에서, 동북아 중심 국가로 역량을 집중하여 현재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자 단기간 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물류거점기능강화) 뿐만 아니라, IT·BT·서비스 중심)으로 특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경쟁 가능한 공항·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외국 자본·인재를 유치하는 등 국가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설정과 추진은 핵심적 국정과제인 동북아 경제중심 프로젝트의 주요 구체적 실천사업 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한 실현방안으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공항 및 항만이 위치한 일정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의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경영 및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을 동북아의 물류중심, 아울러 세계 우수 기업 및 금융의 동북아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 지역 내의 국제적 분업의 확대와 교류협력 등을 기초로 한국은 동북아 경제네트워크의 형성에 능동적·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한·중·일 FTA형성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2003년에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지

정하고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4조 6,031억 원(민자 제외)을 투입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환적화물의 거점 및 물류첨단산업 등의 지원기능을 육성할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대한 지역별 경제구조와 지역 내외 및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여 향후라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3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는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보고서나 안내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황호선(2005)은 참여정부의 주요사업인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안, 특히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안에 대한 비판적 제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광국·오세영(2004)은 상하이 푸둥지구의 개발 벤치마킹을 통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방향에 대해 연구하여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중화와 차별화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상철(2005)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최용록(2004)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Techno-port의 개념적 특성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기능물류항만(Meta-mediary Logistics Hub)의 개념적 특성과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IT산업을 연계하는 공간적, 기능적, 물질적 구성요소로 Techno-port의 개발방안이 각각 IT클러스터, Tele-port와 e-Logistics

1) 서수완·박영태, 2005 참조.

2) 최용록, 2004 참조.

3) 자유무역구역(Free Trade Zone)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 위치하지만, 반대로 경제자유구역은 영국의 London Docklands와 미국의 Hawaii Puerto Rico, 그리고 EU의 Ibiza처럼 선진국에도 존재한다. http://en.wikipedia.org/wiki/Free_economic-zone 참조.

gateway의 시각에서 제시되도록 개발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서수완·박영태(2005)는 중국 물류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고 한국 내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및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대안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의 물류거점기능 강화방안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정태원·박영태(2006)는 2020년 추정물동량을 기준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지구 공항물류단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인접한 산업물류단지의 기능 및 역할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천발전연구원(2003)에서는 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경제적 과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인천의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용유발,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효과 등을 분석하는 데 국한되어 있다.

강영문(2004)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의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지리적, 재정적으로 불리하고, 교통망 등의 인프라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세 개의 지자체와 두 개의 도가 이해관계상의 어려움이 있어 무엇보다도 정부의 지원하에 교통망 등의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강영문(2005)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핵심산업인 물류산업에서 필요한 물류인력 양성에 관한 대책이 시급함을 알리고, 아울러 필요한 물류인력의 요건을 동권역의 특징, 물류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동구역에서 필요한 물류인력의 육성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장흥훈(2004)은 광양만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하

였으며, 산업발전을 위한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석남(2005)은 인적자원의 형성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며, 해외직접투자가 유치지역의 인적자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리고 광주전남지역에 청년층 인적자원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임을 알렸다. 따라서 FDI유치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외자본의 유형에 따라 부문별, 수준별 인적자원의 수급계획과 이에 대한 조기시행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광양만권발전연구원(2003)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과급효과를 생산시설 과급효과와 물류시설과급효과로 구별하여 계산하였는데, 물류시설 과급효과는 생산시설 과급효과, 임금유발효과, 그리고 고용유발효과로 구분하여 계산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3개 구역별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민자 포함)⁴⁾를 대상으로 34개 산업에 대한 지역-산업별 연관분석을 실시하여 지역별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3개 지역의 생산유발효과 분석은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2003)에서 작성한 '2003 동북아 MRIO시산표'에 기초⁵⁾하여 2006년 공공과 민간부문 투자사업비를 기초로 추산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3개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각 경제자유구역별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민자 포함)를 대상으로 34개 산업에 대한 지역-산업별 연관분석을 실시하여 지역별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분

4) 각 경제자유구역청별 2006년도 예산액 기준.

5)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2003. MRIO시산표 작성: 지역 간 교역계수 추정연구 참조.

〈표 1〉 3개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구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지정	'03. 8. 6(제2차 위원회)	'03. 10. 27(제3차 위원회)	'03. 10. 27(제3차 위원회)
위치	송도, 영종 및 청라 일원 총 3개 지구	부산 강서구 및 경남 진해시 일원 총 5개 지역 16개 지구	여수·순천·광양시 및 경남 하동군 일원 총 5개 지구
면적	209 _{km²} (6,336만 평)	104.8 _{km²} (3,172만 평)	90.38 _{km²} (2,733만 평)
기간	'20년까지 단계별 추진 - 1단계: '08년까지 - 2단계: '20년까지	'20년까지 단계별 추진 - I-1단계: '06년까지 - II-2단계: '10년까지 - III단계: '20년까지	'20년까지 단계별 추진 - 1단계: '10년까지 - 2단계: '15년까지 - 3단계: '20년까지
추정 사업비	14조 7,610억 원	7조 6,902억 원	9조 5,087억 원
재원 조달	국고지원(21.4%) 지자체(45.7%) 민자·외자(6.7%) 한국토지공사(26.2%)	국고지원(27.7%) 지자체(40%) 민자·외자(32.3%)	국고지원(30.9%) 지자체(22.3%) 민자·외자(46.8%)
개발 방법	공영개발방식 원칙 (지역특성, 기능에 따라 사업방식 선정, 부동산 가격 영향이 없을 경우 별도 사업인정 가능)		

자료: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제출자료, 2006.

석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기술하고자 한다.

II.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경제자유구역의 설정과 추진은 핵심적 국정과제인 동북아 경제중심 프로젝트의 주요 구체적 실천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 2002년 7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방안에 대한 정부시안이 발표되고, 동년 11월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어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2003년 6월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동년 8월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고, 이어 동년 10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다.

〈표 1〉에서 보듯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송도, 영종, 청라지구를 대상으로 한 수도권 인접지역으로서 세계수준의 국제공항을 바탕으로 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약 14조 7,61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부산 강서구 및 경남 진해시 일원 총 5개 지역 16개 지구를 대상으로 환적화물의 거점 및 물류첨단산업 등의 지원기능을 육성하고자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7조 6,90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여수·순천·광양시 및 경남 하동군 일원 총 5개 지구를 대상으로 부산·진해처럼 환적화물의 거점과 물류첨단산업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동북아 허브항만으로 개발하고자 2020년까지 단계

적으로 9조 5,08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 및 세금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지역을 의미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설립목표는 외국인 투자 및 거주에 유리한 국제화된 기업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 자본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선진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국제적 기업활동의 중심거점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3개 지역에 대해서는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적 지원이 제공된다. 첫째, 국제업무, 물류, 첨단산업 등 국제적인 기업활동 중심거점을 육성하여 외국인 투자 및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둘

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기반시설지원, 세계감면 등 기업활동을 위한 각종 특례적용과 외국기업의 경영환경 및 외국인 생활여건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선호하는 환경여건을 조성한다. 셋째, 조속하고 효과적인 투자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관련 협의절차의 간소화 및 인허가 의제 처리, 각종 관련 부담금의 면제, 외국인 투자, 교육, 금융 및 출입국제도 등 지원이 필요한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세·법인세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한다.⁶⁾ 외국인 임직원에게 대해 총급여액에 단일세율 17%를 적용하고 자본채 수입관세는 3년간 면제한다.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를 3년간 면제하며, 그 후 2년간 50% 감면한다. 외국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조성, 토지 등에 임대료를 감면하고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표 2>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를 위한 주요 인센티브 내용

세금감면	• 외투기업에 소득세·법인세 등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각종 자금지원	• 개발사업 시행자에 농지조성비 등 7개 부담금 감면 •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금 • 외투기업에 임대료 감면(100%까지 가능)
외투기업 경영환경 개선	•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규제 배제 • 국가유공자·장애인 의무고용제 배제 • 주휴무급제, 근로자 파견 대상 업종·기간 확대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초·중·고·대학) • 외국병원 설립 허용(내국인도 진료) • 관공서의 외국어 서비스
행정절차 간소화	• 실시계획 승인으로 36개 법률상 인허가 일괄 의제 • 원스톱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자료: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제출자료, 2006.

6) 5천만 달러 이상 투자 시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경제자유구역추진은 다음과 같은 추진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비상설 협의체로 재정 부장관이 위원장의 역할을 맡고 있고,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재정부에 설치·운영되는 기구이며 현재 인원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3개 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개발, 투자유치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총정원은 207명이고, 인천시 산하 사업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총정원은 155명이고, 부산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총정원은 159명이고, 전남과 경남의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으로서 운영되고 있다.

3개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42조 8,329억 원으로 이중 국고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22조 7,829억 원이고, 지방비는 1조 8,202억 원이며, 민자로 충당되는

부분이 17조 8,415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비중으로 보면, 국고지원이 53%를 차지하고 있고, 민자로 충당되는 예산은 41.6%를 차지하고 있다.

III. 경제자유구역별 지역-산업 간 생산유발 효과 분석

1. 분석개요

1) 분석모형 개요

일반적으로 다지역산업연관모형에서는 각 지역 변수들이 모두 연계되어 있으므로 한 지역의 수요변화는 수요가 발생한 지역과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타 지역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은 지역 간 경제의 순환 구조를 모형 내에서 정식화함으로써 지역 간 파급·환류효과를 포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다지역산업연관표는 각 지역이 독자적인 경제단위로 기능하며, 지역 간 교역계수가 지역경제를 연계하게 된다. 또한 기술계수에 의해서 지역별 경제적

〈표 3〉 3개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예산현황

(단위: 억 원)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입 ('03까지)	'04예산	'05예산	'06예산
	국고	지방비	민자	계				
인천	60,850	12,022	62,291	139,396	3,464	3,735	6,126	10,159
부산·진해	67,579	4,467	52,320	124,016	19,570	4,825	5,589	5,896
광양	99,400	1,713	63,804	164,917	22,759	4,435	7,437	8,526
합계	227,829	18,202	178,415	428,329	45,793	12,995	19,152	24,581

자료: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제출자료, 2006.

7)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은 지역기술계수와 지역교역계수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지역간산업연관모형과 다지역산업연관모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과급효과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며, 지역별 기술계수는 지역 간 교역계수와 결합됨으로써 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중간투입재와 최종재의 규모(지역 수요의 주입 및 누출)를 결정하게 된다. 지역별·산업별 부가가치 항목은 임금, 이윤, 순간접세(간접세-보조금), 감가상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는 지역별·산업별 차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지역별·산업별 수요변화에 따른 과급효과의 격차를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역간산업연관표는 2003년 국토연구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MRIO시산표 작성-기술계수 추정' 결과물을 활용한 것이다. 따라서 두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지역간산업연관분석모형을 추정하였기 때문에 그 모형의 안정성은 다른 연구나 기관의 결과물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국토연구원(2003)의 지역간산업연관분석모형은 첨단산업의 지역별 효율성을 판단하거나 동북아 중심 육성을 위한 적정 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으로 2001~2003년 국토연구원의 연구에서 개발된 KRIHS모형을 근간으로 하면서 취약점을 보완하여 각종 계수를 산출하는 절차를 거쳤다(국토연구원, 2003).⁸⁾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2003)를 기초로 하여 지역별 과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을 16개 행정구역상의 특별시·광역시·도로 분류하였다. 경제자유구역별 산업별 분석 대상은 3개 경제자유구역과 서울 및 경기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고, 이를 34개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지역별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⁹⁾ 지역별·경제적 과급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추정하기 위한 대상 사업비는 3개 지역에 소요되는 공공과 민간부문 2006년도 투자사업비를 대상으로 하였다.

3개 경제자유구역 모두 현 단계에서 산업이 전혀 없기에 수출입유발 효과, 부가가치 효과 등을 분석하는 것은 다소 의미가 없고, 특히 지역별로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분석적 의미가 적다고 판단되어 생략하였다. 즉, 3개 경제자유구역 모두 건설효과가 주를 이루고 있고, 운영효과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고려해서 3개 지역의 생산유발효과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분석대상 투입예산(투자사업비)

<표 3>에서 보듯이, 3개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8) 개발과정을 정리하면 간접기법 중 신뢰도가 높은 RAS 기법을 이용하여 전국 투입계수를 지역 간 기술계수로 전환하고, 다음으로 지역 간 상품중간투입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상품균형법과 엔트로피모형을 이용하여 지역 간 교역계수를 도출하였다. 모형의 분석범위는 2000년 16개 시·도 지역의 34개 산업으로서 정책의 활용 측면에서 건설업 대부분은 5개 소분류 업종으로 세분하였다. 지역 간 교역률은 제1차 KRIHS모형의 결과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지역 간 교역률은 어느 지역의 상품 1단위에 대한 교역이 발생할 경우, 지역 간에 어떻게 이동될 것인지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율은 이출지역 상품의 생산량과 이입지역의 당해 상품의 생산을 위한 고용자 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여 상호작용이 발생될 두 지역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상호작용의 크기는 작아지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 크기는 커질 것으로 상정하였다. 지역 간 교역량은 지역별 산업부문별로 산출된 생산의 과부족분을 지역 간 교역률을 바탕으로 지역 간에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분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교역계수의 현실성이 다소 부족한데, 예를 들어 실제 교역량은 산업연관모형 결과보다 높지만 이를 반영할 논리적 근거가 미흡하다(국토연구원, 2003).

9)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2003)는 2000년 기준 16개 지역 산업연관표를 구축하였다. 여기에 34개 산업별로 16개 지역 간 교역계수를 개발하고 이를 지역 산업연관표(34개 산업기준)로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16개 지역 × 34개 산업) × (16개 지역 × 34개 산업)의 생산유발계수행렬을 산정하고 여기에 경제자유구역별 2006년 투자사업비를 입력하여 지역·산업별 생산유발효과를 추산하였다.

기반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42조 8,329억 원으로 이 중 국고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22조 7,829억 원이고, 지방비는 1조 8,202억 원이며, 민자로 증당되는 부문이 17조 8,415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재정경제부 소관 6개 사업에 대해 1조 2,94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건설교통부 소관 도로사업에 2조 4,350억 원을, 공항건설사업에 4조 8,149억 원을, 철도건설사업에 4조 8,040억 원을 계획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소관에는 3개 항만건설사업에 5,909억 원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재정경제부 소관 3개 사업에

7,058억 원을, 건설교통부 소관 도로사업에 8,427억 원을, 해양수산부 소관 항만건설에 10조 8,531억 원을 계획하고 있다.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은 재정경제부 소관 4개 기반시설사업에 2,167억 원을, 건설교통부 소관 9개 도로사업에 7조 644억 원을, 공항건설사업에 2,100억 원을 그리고 3개 철도건설 사업에 1조 8,826억 원이 계획되어 있다. 해양수산부 소관 항만건설사업에는 1조 9,906억 원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별 생산유발효과 분석을 위해 사용한 투입요소(사업비)는 각 지역별로 2006년도에 투입할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즉, 인천은 국고, 지방비 그리고 민자를 포함해 2006년 예산인 1조 159억 원을, 부산·진해는 5,896억 원을, 그리고 광양

〈표 4〉 3개 경제자유구역별 생산유발효과 종합 (단위: 10억 원)

구분	인천	부산	광양만권
서울	329	25	63
부산	57	676	130
대구	12	21	18
인천	1,245	6	17
광주	7	6	56
대전	30	9	28
울산	26	49	55
경기	452	19	54
강원	36	2	6
충북	39	7	21
충남	64	11	46
전북	22	13	79
전남	37	34	1,398
경북	20	84	36
경남	21	89	67
제주	2	2	13
합계	2,397	1,050	2,086

만권은 8,526억 원을 대상으로 생산유발효과를 추산하게 된다.

2. 분석결과

1) 3개 경제자유구역 지역별 생산유발효과 분석 종합 <표 4>에서 보듯이 3개 경제자유구역별로 추정되는 생산유발효과는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국고, 지방비 그리고 민자를 포함해 2006년 예산인 1조 159억 원을 투입할 경우, 인천지역의 생산유발효과는 1조 2,450억 원으로 추정되며, 지역 간 연계 및 파급효과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지역이 4,520억 원, 서울지역이 3,290억 원 등 수도권지역에 총 7,810억 원 등 총 2조 3,97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되며, 타 지역 간 연계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06년 예산인 5,896억 원을 투입할 경우 예상되는 지역별 생산유발효과를 살펴보면, 부산지역이 6,760억 원이고 경남지역이 890억 원, 경북지역이 840억 원 등 총 1조 5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추산된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수도권(서울, 경기)지역의 생산유발효과는 440억 원에 그칠 전망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2006년 예산인 8,526억 원을 투입할 경우, 예상되는 지역별 생산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전남지역이 1조 3,980억 원이고, 부산지역이 1,300억 원, 그리고 전북지역이 790억 원 등 총 2조 86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추산된다.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대한 2006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지역별 생산유발효과를 보면, 인천의 경우 1조 259억 원의 투자사업비를 투입하여 2조 3,97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보여 약 2.35배 증가를 보이고, 부산·진해의 경우 5,896억 원의 투자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1조 5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보여 약 2배 증가를 나타내며, 광양만권은 8,526억 원의 투자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2조 86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보임에 따라 투자사업비 1단위당 생산유발효과는 광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산유발효과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권역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타 지역과의 연계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업의 추진으로 연계되는 타 산업이 현재 상태에서는 없고 지역 간 연계성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16개 지역-34개 산업 간 생산유발효과 분석
3개 경제자유구역 추진으로 인한 16개 지역-34개 산업별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¹⁰⁾. 즉, 인천 경제자유구역 추진으로 인해 가장 큰 생산유발효과를 보이는 곳은 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으로는 건설, 부동산 및 서비스, 1차 금속 및 철강 등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산업에서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추진으로 인해 가장 큰 생산유발효과를 보이는 곳은 부산, 울산, 경북, 경남순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광역차원에서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산업으로는 인천의 경우처럼 건설, 부동산

10) 34개 산업별 세부결과로부터 요약된 결과다(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을 3개 선정함). 세부적인 결과는 지면제약상 생략한다.

<표 5> 16개 지역별-산업별 생산유발효과 요약

(단위: 10억 원)

구분	인천 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서울	① 부동산 및 서비스(69) ② 금융 및 철강(43) ③ 금융 및 보험(37)	① 부동산 및 서비스(8) ② 금융 및 보험(5) ③ 도소매(2)	① 부동산 및 서비스(16) ② 금융 및 보험(13) ③ 도소매(6)
부산	① 광업(42) ② 부동산 및 서비스(3) ③ 금융 및 보험(2)	① 건설업(589) ② 1차 금속 및 철강(25) ③ 광업(15)	① 광업(96) ② 부동산 및 서비스(6) ③ 금융 및 보험(3.4)
대구	① 부동산 및 서비스(2) ② 금융 및 보험(1.2) ③ 도소매(1.15)	① 1차 금속 및 철강(6) ② 부동산 및 서비스(4) ③ 기계(1.44)	① 부동산 및 서비스(3) ② 금융 및 보험(2) ③ 1차 금속 및 철강(1.7)
인천	① 건설(1,016) ② 1차 금속 및 철강(109) ③ 석유화학고무(33)	① 1차 금속 및 철강(2) ② 부동산 및 서비스(0.6) ③ 석유화학고무(0.5)	① 1차 금속 및 철강(5) ② 석유화학고무(3) ③ 부동산 및 서비스(1.4)
광주	① 부동산 및 서비스(1.1) ② 금융 및 보험(1.0) ③ 석유화학고무(0.8)	① 부동산 및 서비스(1.1) ② 1차 금속 및 철강(1) ③ 금융 및 보험(0.6)	① 1차 금속 및 철강(15) ② 석유화학고무(8.5) ③ 부동산 및 서비스(5.3)
대전	① 1차 금속 및 철강(5.8) ② 석유화학고무(5.5) ③ 광업(4)	① 1차 금속 및 철강(3.2) ② 부동산 및 서비스(1) ③ 석유화학고무(0.6)	① 1차 금속 및 철강(7) ② 석유화학고무(5.1) ③ 광업(3.5)
울산	① 석유화학고무(17) ② 정밀화학(1.7) ③ 자동차(1.4)	① 석유화학고무(17.8) ② 1차 금속 및 철강(16.7) ③ 정밀화학(3.3)	① 석유화학고무(38.7) ② 정밀화학(3.5) ③ 광업(2.6)
경기	① 1차 금속 및 철강(127) ② 비금속광물(53) ③ 기계부품(44)	① 1차 금속 및 철강(4.4) ② 부동산 및 서비스(3.5) ③ 금융 및 보험(1.2)	① 1차 금속 및 철강(9.7) ② 부동산 및 서비스(7.5) ③ 석유화학고무(6)
강원	① 비금속광물(14.5) ② 1차 금속 및 철강(3.7) ③ 부동산 및 서비스(2.5)	① 부동산 및 서비스(0.4) ② 금융 및 보험(0.2) ③ 비금속광물(0.2)	① 비금속광물(1.0) ② 광업(0.73) ③ 부동산 및 서비스(0.7)
충북	① 비금속광물(7.1) ② 1차 금속 및 철강(6.4) ③ 정밀화학(3.4)	① 1차 금속 및 철강(1.8) ② 부동산 및 서비스(1.0) ③ 비금속광물(0.5)	① 비금속광물(5.1) ② 1차 금속 및 철강(3.3) ③ 부동산 및 서비스(1.9)
충남	① 석유화학고무(18.1) ② 1차 금속 및 철강(11.3) ③ 전력가스수도(4.7)	① 1차 금속 및 철강(3.2) ② 석유화학고무(1.3) ③ 부동산 및 서비스(0.9)	① 석유화학고무(13.1) ② 1차 금속 및 철강(9.5) ③ 비금속광물(5)
전북	① 1차 금속 및 철강(4.1) ② 석유화학고무(1.9) ③ 비금속광물(1.8)	① 1차 금속 및 철강(5.4) ② 부동산 및 서비스(1.1) ③ 목재종이(0.8)	① 1차 금속 및 철강(27) ② 비금속광물(23) ③ 석유화학고무(5.1)
전남	① 석유화학고무(14.5) ② 1차금 속 및 철강(7.3) ③ 정밀화학(2.9)	① 1차 금속 및 철강(20.3) ② 석유화학고무(5) ③ 부동산 및 서비스(1.3)	① 건설(853) ② 1차 금속 및 철강(264) ③ 석유화학고무(129)
경북	① 1차 금속 및 철강(3.1) ② 전력가스수도(2.9) ③ 석유화학고무(2.9)	① 1차 금속 및 철강(51.3) ② 비금속광물(8.2) ③ 부동산 및 서비스(4.7)	① 1차 금속 및 철강(9) ② 석유화학고무(4.7) ③ 전력가스수도(4.5)
경남	① 광업(3.4) ② 석유화학고무(3.3) ③ 전력가스수도(2.0)	① 1차 금속 및 철강(35.2) ② 기계(17.9) ③ 비금속광물(6.1)	① 광업(14.4) ② 석유화학고무(11.2) ③ 1차 금속 및 철강(9)
제주	① 부동산 및 서비스(0.3) ② 금융 및 보험(0.3) ③ 사회 및 서비스(0.2)	① 부동산 및 서비스(0.5) ② 금융 및 보험(0.2) ③ 도소매(0.2)	① 비금속광물(3.1) ② 부동산 및 서비스(2.0) ③ 농림어업(1.3)

및 서비스, 1차 금속 및 철강 등 기반시설 확충에 연계된 산업에서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추진으로 인해 가장 큰 생산유발효과를 보이는 곳은 전남, 전북, 광주, 경남순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광양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에 효과가 주로 집중되고 있으며, 산업으로는 부산·진해의 경우처럼 건설, 부동산 및 서비스, 1차 금속 및 철강 등 기반시설 확충에 연계된 산업에서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지난 2003년 지정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의 3개 경제자유구역은 여타 지역에 인정되지 않는 규제완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물류·첨단산업 허브를 목표로 2020년까지 민자사업비를 제외하고 총 24조 6,031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경쟁 가능한 공항·항만이 위치한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물류관련 인프라의 확충과 외국인 경영·생활여건의 개선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물류센터와 지역본부를 유치함으로써, 한국을 동북아 물류중심지 및 세계 우수기업 및 금융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출발하였다.

2006년도 각 경제자유구역별 투입예산¹¹⁾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간 생산유발효과를 추산한 결과, 우선 지역별로 투자사업비 대비 생산유발효과는 약 1.7~2.5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생산유발효과는 3개 경제자유구역 모두 해당권역

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여타 지역과는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의 추진으로 연계되는 타 산업이 현재 상태에서는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추진으로 인해 가장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은 3개 지역 공통적으로 건설, 부동산 및 서비스, 1차 금속 및 철강 등 기반시설 확충에 연계된 산업에서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지역 간 산업연관모형, 즉 국토연구원(2003)의 MRIO모형은 최선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활용 가능한 차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 간 효과가 다소 왜곡될 수 있는 것은 지역 간 교역계수 추정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각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지역 간 교역계수의 추정이 보다 과학적인 방법에 의거 추정될 경우 경제자유구역별 투자사업비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는 다소 달라질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 3개 경제자유구역청. 2006. “주요 현안과제와 향후 추진과제”. 국회예산정책처 제출자료.
- 강영문. 2004.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29(3) : pp229-248.
- 강영문. 2005.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물류인력 양성에 관한 연구”. 물류학회지 15(1) : pp73-100.
- 고석남. 2005.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남해안 발전”. 지역개발연구 37(1) : pp35-57.

11) 2006년도 각 경제자유구역별 건설사업비만을 대상으로 한다.

광양만권발전연구원. 2003.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광양
 향 report.

권두섭. 2003. 경제자유구역, 누구를 위한 자유구역인가. 노동사회.
 국토연구원. 2003. MRIO시산표 작성-기술계수 추정. 국가균형발
 전위원회.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2003. MRIO시산표 작성. 지역 간 교역
 계수 추정연구.

삼성경제연구소. 2000. 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방안. 삼성경제연
 구소.

서수완·박영태. 2005. “국제물류 환경변화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물류거점기능 강화방안”. 물류학회지 15(1) : pp101-139.

이광국·오세영. 2004. “상하이 푸둥지구의 개발벤처마킹을 통한
 부산경제자유구역 개발방향 연구”. 아시아연구 : pp
 231-244.

이상철. 2005. “경제자유구역청의 현황과 과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을 중심으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SIES Working
 Paper Series no.185.

이성우. 2002.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항만구역은 제외되어야”.
 해양수산동향 제1085호.

인천발전연구원. 2003.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제적 파급효과 분
 석”. IDI 정책연구보고서.

장홍훈. 2004.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른 클러스터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연구 제36권 제2호 :
 pp167-186.

재정경제부. 2006.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주요업무현황”. 재정부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재정경제부. 2006. 6.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향후 발전계획”.
 국민경제자문회의 제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 안건(1).

전경련. 2004.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의 개선과제(안). 전경련 CEO
 MEMO.

전경련. 2002. 경제특구 관련제도의 실태와 시사점.

정태원·박영태. 2006. “인천경제자유구역 물류용지 규모산정 및
 역할에 관한 연구”. 물류학회지 제16권 제1호 : pp39-61.

최용록. 2004. “동북아물류허브를 위한 Techno-port의 개발 방안”.
 물류학회지 제29권 제6호 : pp171-189.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등 경제자유구역관련 기사내용
 (2004-2006)

황호선. 2005.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안에 대한 고
 찰”.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3집 1호.

- 논문 접수일 : 2006. 10. 9
- 심사 시작일 : 2006. 10. 12
- 심사 완료일 : 2006. 11. 29

ABSTRACT

**An Analysis of Production-Driven Effects
from Three Free Economic Zones in Korea**

Chuh-Hwan Park Professor, Dept. of Finance and Economics, Yeungnam University
(Primary Author & Corresponding Author)

Eui-June Kim Associate Professor,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Dong-Jin Shin Economic Policy Analyst,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Key words : Free Economic Zones, Production-Driven Effect,
Multi-Regional Input-Output Analysis

This paper analysis for the regional-industrial production-driven effects from the three free economic zones that government have established in the year 2003 for the East-Asia oriented business in the future. By inputting the year 2006's budget in the analytical I/O system as a base input factor, the regional-industrial production-driven effect for the free economic zones is about to increasing by 1.8~2.5 twice as many, and the effect happens to the original region of each economic free zones and is lowly related with other industries due to the initial state of the business. However, the most strong effects in the three free economic zones go to the construction, real estate, and steel industry sector because of the beginning state of the infrastructure. We infer from the analytical results tha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three free economic zones with other industries will be enlarge in the few years when the government including local representative increases the government budget as well as draws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s from other countries and global firms.

КСІ